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김 명 식*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주제어]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1. 한국에서의 실험

- 1) 1999년 9월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는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합의회의가

* Lancaster University, Institute for Environment, Philosophy & Public Policy, Post Doc.
전자우편 : m.s.kim@lancaster.ac.uk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렸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회과학기술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과학기자클럽,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수정란 이식학회에서 후원했다. 이것은 98년 11월 송실대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첫 번째 합의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의 합의회였다. 첫 번째 합의회에 주어진 여론의 관심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합의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실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번 합의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실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민패널들은 신문과 방송, 상용 통신망을 통해서 모집되었는데 88명이 지원, 최종 16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통해 궁금한 것, 의심되는 것, 우려되는 것 등을 추려 모두 10개의 주요질문¹⁾을 스스로 선정하였고, 이것을 조정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역시 자신들이 선정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과 토론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패널 내부의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입장을 보고서로 남겼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선 인간 개체복제의 경우 완전히 금지하고, 인간배아복제도 그 의료적 이점과 기술적 위험이 불확실하므로 현재로서는 역시 금지하며, 동물복제의 경우만 엄격한 감독과 관리하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격론을 벌였던 부분은 인간배아복제 부분이었다고 한다.²⁾

이들의 발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연구실에서 실험에 열중하던 생

-
- 1) 시민패널이 선정한 주요질문은 1)생명복제기술이란? 2)생명복제기술의 이점, 3)복제기술의 문제점, 4)생명의 출발점, 5)생명복제기술의 허용 한계, 6)생명복제기술의 경제적 이해관계, 7)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동향, 8)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안, 9)과학자와 시민의 윤리와 그 교육방안, 10)생명복제기술에 있어 종교계의 역할 등이다. (시민패널 보고서, 1999 참고)
 - 2) 논란이 된 것은 인간 생명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이다. 수정 후 14일이 되면 '원시선'이 형성되는데, 원시선이 생기면 개체의 기본 단위인 배아 발생과 함께 장기 발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원시선이 생기기 이전은 개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렇듯 발생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결국 16명 중 14명은 수정 후부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세포분열이 시작되므로 수정란이 형성된 직후를 인간생명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14일 이후부터 생명으로 본다는 소수 의견을 표명했다.(시민패널 보고서, 1999 참고)

명공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21세기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을 필두로 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전체에 생명공학문제의 심각함을 환기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 자문기관으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공학, 의학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전문가, 종교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함시켰다. 현재는 관련입법을 준비중이다.

2) 정부의 정책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주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의 대표도 아닌, 그야말로 보통시민들이 참여해 생명복제라는 그다지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명확한 의도로 자신들의 합의사항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시민참여의 한 획을 긋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의 독점적 의사결정에 대항하여,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른바 ‘기술시민권’을 얻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 환경, 지역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시대적 조류인 참여민주주의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이것은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심의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도 대표도 아닌 실제 보통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민주주의가 과연 누가(Who)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면, 심의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How)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즉 그것은 시민의 선호를 그냥 취합해 결정해야 한다는 ‘선호취합적’(preference aggregating)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성찰에 기초한 토론에 의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념인 것이다.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토론민주주의’, ‘담론민주주의’, ‘담화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담론윤리학자로 알려진 하버마스의 몇 년 전 방한과 더불어 심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담론민주주의이론(Diskurstheorie der Demokratie)은 간간히 소개되기는 했지만 심의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³⁾ 사회주의의 종말 이후 현재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맹위를 떨치는 지금, 심의민주주의는 그것에 대한 대항논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셈이다

이 글은 이번 합의회의가 심의민주주의이념의 실험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번 합의회의의 구체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아직 이론적 수준에서 도입단계에 있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가능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가 되는 이념들을 살펴본다. 필자는 이것을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로 본다. 그 다음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인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마지막은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합의회의를 통해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본다.

2. 합의회의의 이론적 배경

합의회의는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것은 현재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합의회의는 과학상점,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설계, 시민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과학기술분야의 시민참여모델의 하나로써 계획된 것이다.⁴⁾

합의회의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평가의 임무를 가진 10-16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공적 탐구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 보통(lay) 사람들이 전문가 패널에 질문과 관심사항을 이야기하

3)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임혁백의 「밀레니엄 시대의 민주주의 대안: 심의 민주주의」(계간사상 1999, 겨울호)가 있고, 이것은 임혁백(2000)의 5장에 재수록되었다.

4) Durant(1995: 79), 이영희(2000: 270-278).

고, 전문가의 대답을 평가하고, 그 다음 그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회의의 종결과 더불어 보고서의 형태로 대중에게 발표된다.⁵⁾ 그것은 기존의 전문가들간의 토론, 또는 이해집단간의 토론을 넘어, 그 범위를 일반시민에게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정책이 일반대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과학기술은 대중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인류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합의회의의 배경으로 1)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2) 사회적 토론의 전통 3) 심의민주주의를 들고자 한다

2.1.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과학의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of Science)는 과학기술사회학의 주요 흐름으로, 지식을 그 사회적 배경과 연관해 연구한 지식사회학적 전통이 과학기술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의 사회구성주의가 나타난 배경은 1960년대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는 카슨(R. Carson)의 『침묵의 봄』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알려지고,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최신펙기가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던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손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때마침 포퍼(K. Popper)로 대표되는 정통과학철학에 대해 쿤(T. Kuhn)이 과학사에 기초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의 사회구성주의의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쿤에 따르면, 과학이론은 포퍼가 가정하듯 실험데이터에 의해 결정적으로 반증되어 폐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험관찰이란 것도 연구자의 이론체계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른바 '증거에 의한 과학이론의 불충분결정성'과 '관찰의 이론 의존성' 체계이다. 이것은 이후 과학의 본질과 관련된 거대한 논쟁을 낳는다.⁶⁾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대 영국의 에든버러대학을 중심으

5) Durant(1995: 9, 76).

로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자전거와 형광등의 발달사)를 통해 기술적 인공물이 결국은 과학자, 기술자 집단 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과학논쟁의 종결 또한 과학자들간의 사회적 협상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의 사회구성주의의 특징은 암흑상자(black box)로 표현된 과학기술의 내용을 해체해서 그 사회적 성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이 실험실의 진공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하나하나 가공된다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은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처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의 지식도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결정에서 비전문가의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에 대한 논의로 나간다.⁶⁾

과학의 사회구성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실재론, 반실재론의 논쟁에 걸려 있고, 현실적으로는 상대주의에 아무래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철학자나, 또는 과학이 '협상'의 산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학자 집단이 갖는 불쾌감을 극복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영역에서의 인간의 참여문제에 관한 한 기존의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보다 확실한 강점을 지닌다.⁸⁾ 가령 다니엘 벨(D. Bell)이나 토플러(E. Toffler)의 낙관주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과학의 병폐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점은 엘룰(J. Ellul)이나 요나스(H. Jonas)로 대표되는 비관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령 엘룰은⁹⁾ 심도 있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 '기술의 자기확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6) 김환석(1999), Hesse(1997).

7)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1)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 2) 과학기술 정책결정에 참여의 권리 3)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4)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제한시킬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영희, 2000: 261-2).

8) Barbour(1993: 3-25).

9) Ellul(1996: 76-163).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요나스의¹⁰⁾ “구원의 예측보다는 불행의 예측을 더 중시해야 한다”, “성장보다는 감축이 표어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주의는 낙관주의에 대한 상쇄논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의 맥락에서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등 생명개입 기술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불치병에 걸린 가족에게 유전자 치료를 받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금방 입장이 바뀐다.¹¹⁾ 식량사정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과학기술이 주는 문명의 이기는 단순한 사치라기보다는 인류의 ‘문화적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토대이다.

과학의 사회구성주의는 위험사회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더욱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다. 특히 울리히 벡(U. Beck)의 주장, 즉 현재의 위험은 콜롬버스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만 감수해야 할 개인적 차원의 위험이 아니라 핵분열과 방사능폐기물의 축적처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위험이며,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끔 만든다.¹²⁾

과학기술이 낳는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과학기술체계의 내적인 필연적인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윈(B. Wynne)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단순화의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즉 과학기술의 목적인 설명과 예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성을 줄이고 또 많은 가정들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위험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¹³⁾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가진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을 활용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지적 지식은 그 지역의 환경과 전통, 문화라는 사회맥락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진 체계적인 지식이 필연적으로 추상화과정에서 놓쳐버리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장지대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갖는

10) Jonas(1995).

11) 박은정(2000: 52).

12) Beck(1997: 55-59).

13) Wynne(1992).

오염에 대한 자각은 때로는 전문가가 갖는 예측능력보다 앞설 때도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¹⁴⁾

이것은 일반시민(lay)이 가진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앞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기존 과학지식에 대한 비판으로 소극적(negative)인 성격을 지닌다면, 이것은 일반시민의 국지적 지식을 활용해 위험사회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자는 적극적(positive) 대안이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 사회적 토론의 전통

합의회의라는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가가 가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시민 입장에서 일종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즉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기존의 과학기술평가와 정책이 위험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실제 참여로 나가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크론버그(T. Cronberg)의 지적¹⁵⁾은 아직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목을 요한다. 그는 합의회의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덴마크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a tradition of societal debate)을 거론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고 한 두 번이고 많아야 세 번 열렸을 뿐이지만, 덴마크는 가장 먼저 합의회의를 출범시켰고, 횟수도 지금까지 무려 17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덴마크 사회의 고유성에 대한 연구의 충분한 배경이 된다. 크론버그에 따르면, 덴마크에는 덴마크 특유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토론의 전통'이다. 이것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그룬티비히(N. Grundtvig)의 영향에 기초한다. 덴마크에서는 19세기이래 그룬티비히가 주도한 성인대학 또는 고등공민학교(Volkshochschule)로 알려진 교육체계가 활성화되었다. 이 학교는 원래 프로이센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민족문화를 고취시키고,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를 통해서 근로청소년들과 성인들은 직접적인 직업상의 목적 없이 평생교육에 참

14) 이런 맥락에서 암묵지나, 민간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온다(김동광, 1999).

15) Cronberg(1995: 125-6).

여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토론주제에는 예술,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나 생명공학 같은 과학기술의 주제까지 포함되는데, 토론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이런 주제들을 다룰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시민이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더 나은 시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나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로 하여금 합의회의에 관심을 갖고 실제 참여하게끔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회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STS)나 생명윤리교육,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사회적 토론의 전통'을 학교와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2.3. 심의민주주의

합의회의의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의 정치이념인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참여민주주의적 측면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만,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¹⁶⁾ 이런 점에서 합의회의가 갖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민주주의가 '누가'(Who) 결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심의민주주의는 어떻게(How)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참여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제도로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났던 이른바 '의원임대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대의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긴 하나, 대의제의 문제는 대

16) 이것은 우선 합의회의 자체가 기술평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합의회의의 도입 또한 과학기술사회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영희, 1997). 셋째,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진해,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구학계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본격화된다.

의제라는 형식 속에 필연적으로 내포된 것이기도 하다.¹⁷⁾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심의민주주의이다. 이번 합의회의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것은 이를 주최한 주최측이나 참여한 시민패널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분명하다. 우선 합의회의가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합의회의의 틀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선 시민패널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는 점이 그렇다. 만일 시민들의 '참여'만 추구했다면 굳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단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지 관련 생명공학자의 자문만 받으면 된다. 이번 합의회의에서는 전문가 패널 안에 자연과학자와 거의 동수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포진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복제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차원이 아니라 가치판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선호 및 가치체계를 바꿀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심의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둘째, 합의회의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단순한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고, 이에 기초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토론이다. 그것은 자기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에서 전략적 행위가 지배하는 협상, 흥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편성에 기초해 진리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설득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리고 보편성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점은 시민패널을 선정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17) 대의제에서 대표자들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나중의 통제를 예상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표자들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확실히 애매한 것이다. 의회회기동안의 투표기록은 단지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Elster, 1998: 2-3).

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덴마크에서나, 한국에서나¹⁸⁾ 시민패널들은 이해집단의 대표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관련 과학기술과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울리히 벡의 지적대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넓은 의미의 이해당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시민들은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위치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과는 다르다. 넓은 의미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공평하고, 바람직한 판단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해지고 쉽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은 비록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사회적 위치에 있다.

합의회의를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공청회는 1)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한다는 점, 2) 정책결정자들이 참석자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간의 의사소통과정은 없다는 점, 3) 그리고 현실적으로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해당사자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주장을 편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시민과학론에서 제기되는 과학상점의 경우 1) 시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2)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의사소통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와 다르지만, 3)의 관점에서는 공청회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 합의회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보편성에 기초해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과학상점과도 구별된다.¹⁹⁾

18) 시민패널의 자격: 모집광고에는 18세 이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 가능한 분,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분,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 숙박, 교통비, 및 필요경비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 (Cronberg 1995: 127), (김두환 1999: 55).

19) 합의회의는 노사정회의와도 다르다. 노사정회의가 정부의 중재아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인 반면, 합의회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보통 시민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토론에 기초한다. '토론'(discuss)과 '협상'(negotiation)은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3.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1. 배경

지난 10년간은 민주주의 이론이 심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룩한 시기라고 평가된다. 그만큼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경제논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시장의 논리, 비용편익분석, 합리적 선택이론, 그리고 이에 기초한 공공선택이론의 공세 속에서 심의민주주의는 이것들에 맞서는 하나의 거대흐름인 것이다.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버마스(J. Habermas)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수행한 담론윤리의 작업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했고, 특히 1992년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통해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물론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히 하버마스만의 작업도 아니며, 하버마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완성되지 않는다. 유럽의 비판이론의 전통에서 있는 하버마스과 달리 영미 자유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있는 롤즈(J. Rawls) 또한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기능으로서 심의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되며, 버크(E. Burke), 밀(J. S. Mill),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듀이(J. Dewey)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1990년 이전까지 심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거의 드물게 사용되었다. 심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베세트(J. Bessette)에 의해 창안되었고, 후에 코헨(J. Cohen)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저작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Benhabib, Bohman, Dryzek, Elster, Estlund, Gutman, Miller, Sunstein, Thomson)이 그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면서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론에 중요한 쟁점을 제공한다.²⁰⁾

이런 점에서 토론에 기초한 심의민주주의 이념은 이해집단간의 협상을 강조하는 과학의 사회구성주의와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3.2. 특징

심의민주주의를 간단히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자들이 워낙 많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제기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엘스터(J. Elster)의 지적대로²¹⁾ 심의민주주의이론가들의 주장들 사이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참여민주적인 측면과 심의적 측면이 그것이다.

참여민주적 측면이란 결정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이들의 참여에 기초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²²⁾ 심의적 측면이란 합리성과 무사공평성의 가치를 수용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논증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심의(deliberation)는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과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심의자들(deliberators)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과 선호, 그리고 견해를 바꿀 태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심의는 강압, 조작, 사기가 아니라 설득과 관련된다는 점도 그렇다. 이것은 투표(voting), 협상, 흥정, 이익취합(interest aggregation)과 대비되는 심의의 본질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심의민주주의의 특징을 거칠지만 정리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선호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심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선호를 모아 그것에 기초해 선호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이성적인(reasoned) 성찰과 판단을 중시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

20) 90년대 후반에 이 분야의 논문선집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그 한 예이다.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J. Bohman and W. Rehg (eds)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MIT Press, Cambridge Mass., 1997); J. Elster (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또 1999년 전후로 정치학과 사회학 관련 저널들(구체적으로는 *Political Studies*, *Social Criticism*)에서 심의민주주의를 특집으로 다룬 것이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렌트(H. Arendt) 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1) Elster(1998: 8).

22) 하지만 예외도 있다. 가령 버크(E. Burke) 같은 경우는 심의적 기능은 중시하지만, 참여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현대 심의민주주의이론은 대개 참여적 부분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엘스터의 이러한 정의에는 큰 무리가 없다.

고, 항상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심의적 의사결정의 과정은 상호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선호를 사회맥락으로부터 독립해 존재하고, 고정된 것으로 보는 시장경제학, 시장민주주의의 기본전제와 충돌한다.

2. 공동체 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공적인 문제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선호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체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사익에 근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토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심의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 중에서 공화주의 전통에 가깝고²³⁾, 윤리학계를 달궂놓았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과도 연관된다.

3. 참여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소수의 대표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심의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나 엘리트 민주주의, 전문가 정치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4. 이성주의적 기초를 담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즉자적 선호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합의를 신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철학의 굳건한 전통인 이성주의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추세는 각 개인들이 가진 언어능력을 통해, 대화를 통해 이성이 추구된다는 점에서 현대철학의 '특징인 언어철학적 배경에 입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하버마스, 아펠의 보편화용론과도 연관되고, 동시에 포스트모던 논쟁과도 연관된다.

23) 하버마스는 심의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그것들의 발전적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의민주주의는 공화주의적 측면이 강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Habermas, 1996).

5. 합의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것은 이성에 의해,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낙관주의를 깔고 있다. 이러한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 차이의 정치학으로부터 반론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필자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심의민주주의를 “1) 자유롭고 2) 평등한 3)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4) 보편성에 입각한 토론을 거쳐 5) 합의하려는 정치이념”으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선교회육과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 이후에 합의회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²⁴⁾

3.3. 적용분야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처럼 주로 국가제도(가령 의회제도나 사법제도)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럽의 비판이론적 전통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영역’에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철학분야에서는 새고프(M. Sagoff)나 오닐(J. O'Neill)의 논의를 통해 경제학적 방법(구체적으로는 시장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²⁵⁾ 또한 이것은 생명복제를 다룬 합의회의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ies)를 합의회의와 더불어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는 양대 과학기술평가로 볼 수 있다.²⁶⁾

24) 이 규정은 이번 합의회의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필자가 잠정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심의민주주의가 워낙 포괄적, 역동적인 정치이념이고, 또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심의민주주의를 이렇듯 간단히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수정되거나 보완,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 필자가 선택한 다섯 가지 조항 중 3) 시민들이라는 조항은 필자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다소 인위적으로 설정한 개념이고, 나머지 4개의 조항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이라 판단된다. (Habermas, 2000: 7장; Cohen, 1996: 95-119; Elster, 1998: 8-10; Bohman, 1998: 401-402; Benhabib, 1996: 69-74) 참고.

25) O'Neill(1993).

26) Barnes(1999).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삶의 영역, 가령 교육, 치안, 작업장, 기술훈련, 민관공동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육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중요한 정책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치안 문제나 다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²⁷⁾

4. 합의회의를 통해본 심의민주주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이제 갓 출범한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이론적 시험과 현실의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선 그것은 '합의가능성'과 관련해 포스트모더니즘 및 다원주의, '차이의 정치학'과의 논쟁을 거쳐야 한다. 또한 '도덕의 과잉', '정치의 과잉', '비효율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시장민주주의나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의 지지자들과도 한판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또한 어떤 면에서 (경제)체계를 방치한다는 측면에서 좌파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철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논쟁들보다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버마스, 데리다, 푸코 등 당대의 대가들이 참여했던 포스트모던 논쟁이 실천적 성격을 탈색해 이제는 문화이론에서나 구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적도 희미해지고, 영미 윤리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자아의 형성과 관련한 논쟁'에 치우치는 것에 비해 심의민주주의는 정치전반, 사회전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식론, 정치철학, 사회이론, 정치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합의회의)와도 연관되는 거대한 논쟁으로, 이제 논쟁의 걸음마 단계를 겨우 밟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그리고 합의회의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2차례의 경험에 불과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덴마크의 경우도 20년의 역사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의

27) 브라질에서 있었던 참여적 시민예산, 교육 및 치안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었던 미국 시카고시의 주민위원회, 그리고 노동자 교육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밀워키 시의 사례에 대해서는 임혁백(2000: 172-176) 참고.

평가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 하지만 심의민주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을 요하는 정치이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의미가 있다.

4.1. 의미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선호취합적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었다.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게임이론(game theory), 그리고 투표를 강조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모두 선호취합적 민주주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이론들의 공통가정은 1) 시민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것에 기초해 정책결정을 한다는 가정 2)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가정이다. 이번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이 실제 보여준 모습은 이런 가정들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었다.

우선 합의회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선호 및 가치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여러 보고서들은 확연히 보여준다. 시민들은 관련지식, 견해, 태도, 가치 등 모든 영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였다. 지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답변을 주었고, 6명은 많이 바뀌었다는 답변을 주었다. 또한 견해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8명이 많이 바뀌었거나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²⁸⁾

여기서 우리는 선호가 그 자체 주어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처음의 선호가 조야한 선호(rude preference)라면 나중의 선호는 일정한 지식에 기초한 계몽된 선호(informed preference)이다. 이때 정책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은 최초로 있었던 조야한 선호인가, 아니면 나중에 생성된 일정한 지식에 기초한 계몽된 선호인가?

이와 관련된 예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최근 새만금간척 논쟁

28) 김만수(2000: 61-69, 84-90), 김두환(2000: 65-86). 그리고 외국의 경우 합의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언론의 보도 여부에 따라 선호의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이영희, 2000: 218-219).

에서 관건이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선호의 변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갯벌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생태계의 자정원으로서 갯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브라운관을 통해 방영되면서 생태학적 지식의 세례를 받은 결과 현재 갯벌에 대한 인식은 그전과는 판이하다. 이때 정책결정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선호인가? 최초의 선호인가, 아니면 생태학적 지식에 기초한 새로운 선호인가?

이는 생명복제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정보와 담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냥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직관, 또는 21세기 생명공학이 주는 장미 빛 무지개에 기초한 선호만이 표명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정책결정의 자료로는 모두 한계를 지닌다. 우리의 바람직한 정책결정은 생명공학 등의 자연과학적 지식, 그리고 생명윤리 교육이 전제된 상태에서 나온 선호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이야말로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동시에, 민주적인 절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토론과정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사유, 공동체적 사유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민패널들은 생명복제와 관련해 자기이익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같이 고려하는 보편적 사유, 공동체적 사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가령 생명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한 패널은 “내가 불치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복제연구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⁹⁾라는 말을 남긴다.

물론 3일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참여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시민패널에 지원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성향 자체는 원래부터 공동체지향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심의민주주의의 기본절차인 토론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또 발전한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설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이익이나 선호가 아니라 대화 상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나 보편성에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들

29) 김두환(2000: 78-79).

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편적 사유, 공동체적 사유로 나아간다. 여기서 사회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입시경쟁체제 아래에서는 수험생들은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지기가 어렵다.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적이고 비판적인 성품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련내용을 소화해 요구하는 답을 잘 쓰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적이고 비판적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솔직하게 상황에 순응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점에서 토론은 공동체의 발전에도 필요한 사회제도이다.³⁰⁾

진화론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조건에 따라, 그리고 사회조건에 따라 인간의 본성도, 도덕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제도, 환경, 조건을 통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마치 인간과 분리된 절대적 자연(nature) 그 자체가 없고, 단지 사회문화에 의해 구성된 자연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human nature)도 그렇다. 인간본성도 제도, 환경, 조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합의회의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4.2. 심의민주주의의 방향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이번 합의회의는 손색이 없었는가? 그리고 심의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은 생명복제 합의회의라는 구체적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다룰 내용이다. 여기서는 앞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보편성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려는 이념”이라는 기준을 단초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겠다.

1)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는 외적 강제, 내적 강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 강제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또는 권력관계에 의한 강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적 강

30) 토론과 이성, 그리고 그것에 따른 도덕성의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Singer(1983: 3, 4장) 참고.

제는 그것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반면 내적 강제라는 개념은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다. 특히 그것은 여론조작이나 상징조작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공상태의 판단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특히 합의회의의 경우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는다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더욱 더 그렇다. 결국 내적 강제의 문제는 시민들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에서 정보제공에 '공정성'이 있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정성이란 여론의 영향력, 합의회의의 전문가 패널의 선정 및 이들이 제공한 정보, 그리고 합의회의의 구체적 진행과정 모두에 해당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복제에 관한 것들 중 과연 찬반양론 모두에 대한 정보가 공정하게 제시되었는가, 그리고 관련 절차 또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회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본회의 첫날 연우무대의 연극이 명백하게 생명공학기술의 암울한 미래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생명복제에 찬성하는 클로나이드 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³¹⁾ 필자가 보기에 영화나 연극 매체가 가진 힘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죄수의 사형장면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반대론자가 되는 반면 죄수의 범죄장면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존치론자가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합의회의의 전문가패널의 구성,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일종의 합의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평등한가?

평등한가의 문제는 헌법상 주어진 권리가 평등했는가 하는 형식적인 평등 외에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서 평등한가 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한 문제거리이다. 이것은 '심의'가 합의하는 원초적 불평등성으로 인해 심의민주주의가 부딪치는 가장 곤혹스런 문제이다. 예상했던 대로 이

31) 김두환(2000: 105).

번 합의회의에서도 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시간이 진행되면 될수록 일부 시민패널들의 발언시간이 길어지고 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민패널들의 평가모임에서도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시민패널들 내부에서도 일종의 위계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느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³²⁾

전문가 패널과 시민패널 사이의 위계 문제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패널간의 위계 문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 또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리라 가정되지만, 실제 대화는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힘의 거대한 부조화와 차이를 배경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³⁾ 토론능력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상당 부분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경우 토론능력과 지식능력은 교육배경에 의해 결정되고, 이런 교육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같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토론 능력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몇몇 가정들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심의민주주의의 가정 또한 많은 부분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의민주주의는 새로운 의미의 엘리트주의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반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³⁴⁾ 물론 심의민주주의에서도 토론과정이 끝난 후 최후의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모두에게 공정한 한표의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토론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평등한 권력

32) 김두환(2000: 109).

33) 오늘날 이와 관련해 시장민주주의의 권력관계가 부에 기초한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라면 심의민주주의에서는 ‘말할 용의’(willingness to say)이며, 말할 용의 또한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심의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O'Neill, 2001a).

34) 이런 관점에서 하버마스 이론에 입각해 유능함(competence)과 공정성(fairness)의 측면에서 시민참여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Renn & Webler & Wiedemann(1995)을 참조할 것.

이란 입장에서 투표제도를 신봉하는 대의제민주주의자들의 비판을 물리칠 수가 없다. 따라서 토론의 소수지배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발언권이 특정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한다거나, 발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려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롤즈가 역차별의 원리로 제시한 '보상의 원리'(redress theory)에 의해 이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롤즈의 체계에서 이것은 그간 행해진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신이 원초적으로 부여한 토론능력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보상으로 '토론능력에 있어서의 최하층'을 배려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롤즈의 체계에서 마치 최하층 배려의 원칙이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³⁵⁾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논리가 강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중해주는 토론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심각히 고려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3) 왜 시민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성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합의회의에서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것은 과연 1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이다. 어차피 16명을 가지고는 인구통계학적인 대표성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합의회의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통계적 대표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³⁶⁾

35) Rawls(1973: 100-108) 참고.

36)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완벽한 대표성은 오천만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문제가 된 것은 시민패널 대부분의 학력이 대졸 이상 이었고, 직업에서도 1, 2차 산업 종사자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대부분이 수도권 시민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편중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보통 20대 1), 우리나라의 지원자 수(6대 1)가 너무 적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문제삼는 것은 왜 유독 시민들만이, 왜 현재대 인간들의 대표만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은 그것이 시민들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즉 그들이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당사자였다는 점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세대 및 자연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이다. 현재의 생명복제는 미래세대 및 동물의 신체와 출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대표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물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반면 미래세대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적어도 대원칙에 있어서는 윤리학계나 일반인들이나 상당부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³⁷⁾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미래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합의회의의 시민패널 중에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번 시민패널들 16명 중 6명은 동물복제까지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는 물론 동물에 대해서도 비교적 배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하지만 이것은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결과이다. 보통사람보다 평소에 환경문제, 생명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번 합의회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몇몇 전문가 패널이 불평했듯,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 즉 미래세대나 생명문제에 대해 보통시민들이 갖는 평균 이상의 관심은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시민의 대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도 미래

37)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의 근본 이념으로 유엔의 기본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세대의 번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식(2000)을 참고할 것.

38) 이것은 "동물이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복제 실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강자로서의 인간이 약자인 동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지배와 폭력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시민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시민패널 발표문 5장).

세대나 자연에 대한 배려를 우연의 영역에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³⁹⁾

4) 왜 보편성에 입각한 토론인가?

토론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에 비해 장점이 많다. 그것은 양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내 줄 수도 있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조야한 선호를 걸러 책임있는 정책결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성에 입각한 토론'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토론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행해진다는 점이고, 토론에서 인정되는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중에도 의미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주제이고, 언어철학이나 담론철학의 성과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토론이라는 형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이론가인 영(I. M. Young)에 따르면, 토론은 기본적으로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높이 평가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논리적인 근거제시보다는 정서의 표출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은 토론에는 비판적 논증 이외에 인사(greeting), 수사학(rhetoric),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생명복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인 논증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왜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보편적인 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사 가

39)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주요정책과정에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존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가령 행정부에 무임소 장관으로 미래세대부를 신설해 국무회의의 의결과정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Goodin, 1996; Dobson, 1996).

40) Young(1996). 이외에 유머(humour), 감정(emotion), 전문가의 증언(testimony), 가십(gossip)으로 더 넓혀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Dryzek(2000); O'Neill(2001b).

능하다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일급 학자들도 대부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생태주의자들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이 '체험'과 '직관'에 기초한다고 한다.⁴¹⁾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직접 자연에서 그냥 느껴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태주의자가 자기의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 다른 패널들을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종교적 체험에서 비롯한 생명사상 모두에 해당한다. 종교가들이 자기의 종교체험을 위해 선(禪)을 행하라, 또는 새벽교회에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신앙에 기초한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해도 좋은 단순한 선호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객관적 논거로 논증의 형태로 제시될 수 없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감정은 단순히 선호도 아니며, 또한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종교적 가치에 따라 정책결정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대안은 토론의 한계, 논리의 한계, 언어의 한계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일종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 실증주의가 '경험과 관찰'이란 기준아래 지식의 영역에서 추방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시 추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의민주주의는 토론과 논리라는 기준 아래 또 이런 것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암묵지, 민간지, 체계화가 곤란한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여기서 보편적 이성과 그것이 배제하는 다른 수많은 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는 남는다.

5) 합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이다.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최근 차이의 정치학, 페미니즘, 다원주의가 거세게 도전하는 문제이다.⁴²⁾ 특히 생명복제

41) Naess(1979).

42) 대표적으로는 Mouffe(1999).

처럼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사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합의의 전망을 어렵게 한다. 이번에도 의견이나 지식의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가치태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적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⁴³⁾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과연 합의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단시일 내에 완전한 의미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되는 합의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즉 만장일치란 기준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3일이란 시간은 오랜 세월 가져왔던 그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만일 이 점을 무시한다면 더 문제가 된다.

보고에 따르면 최종토론단계까지 견해를 유보하고 있던 시민패널들의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마지막에 구체적 견해를 발표할 것을 강요받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견해를 바꾼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면접과정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면접과정에서 일부 시민패널들은 최종보고서 작성시의 견해가 확신에 찬 견해라기보다는 다소간의 갈등적 상황에서 일종의 개인적 타협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또 이는 시민패널의 입을 통해서도 직접 발견할 수 있다.

“한가지 진행하면서 문제로 느꼈던 부분은 ‘합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의식하여 주관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합의회의의 목적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으나 합의 이전에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⁴⁵⁾

하지만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합의회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더

43) 김두환(2000: 90-91), 김만수(2000: 86-87).

44) 이번 합의회의에서는 시민들간의 합의를 통해 4/5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를 ‘합의’라고 하기로 하였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는 만장일치에 대해서만 합의라고 하고,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더 연장하기도 한다(김두환 76). 하지만 필자의 판단은 교황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집단처럼 비교적 유사한 가치체계와 경험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면, 가치문제에 관한 만장일치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45) 심순영(1999).

욱 문제가 있다.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그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고, 그런 만큼이나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위해서라도 더 장기간의,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그간 합의과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전문가나 정책결정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더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합의회의는 '합의도출'이라는 그것의 결과보다는 '사회적 토론과정'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이번 합의회의가 심의민주주의 이념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심의민주주의라는 이념의 관점에서 이번 합의회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합의회의라는 구체적 현실을 통해서 심의민주주의라는 철학적, 정치적 이념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점검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민주주의라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념을 평가한다는 것, 그것도 합의회의처럼 서구나 우리나라나 역사가 일천한 제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의민주주의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험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우선 합의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심의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와 가치를 변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 지향의 사고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시장경제학, 합리적 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대의제 등 선호취합적 민주주의 모델의 기본 가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 이론들은 선호를 사회맥락에서 분리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의 한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의민주주의의 이념은 실현되기 쉬운 이념도 또한 완결된 이념도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하다.

우선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간의 토론능력의 불평등 문제는 심의민주주의의이념의 실현이 그리 쉽지않은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심의민주주의가 나온 배경을 고려해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시장민주주의나 대의제민주주의 등 다른 경쟁모델과 비교해볼 때 심의민주주의가 가진 매력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갖는 '참여적 측면'이다. 즉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가 대표자인가 또는 전문가인가와 무관하게 보통시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정치적 정당성(legitimacy)도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이다. 그러나 심의과정에 나타난 토론능력에 있어서의 시민패널의 위계는 이런 애초의 의도와는 상반된다. 심의민주주의가 참여적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시도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의민주주의는 미래세대와 자연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결정과제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는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명복제나 환경문제같이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미래세대의 삶을 배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시민패널 개인이 가진 자비심이나 성향 등 우연적 요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심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토론이라는 형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즉 토론과 논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논증에 의해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회의에서 다룬 생명복제 문제에서 생명의 존엄성 문제는 의사결정에 관건이 된다. 그런데 생명의 존엄성을 논증의 형태로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불일치는 극복될 수 있을지라도 가치관과 관련된 합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역정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를 합의회의가 개최되는 3일이라는 기간 내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합의회의에서 기

대되는 합의의 수준을 낮추고, 합의회의의 의미를 '구체적 합의의 도출' 보다는 '사회적 토론의 과정'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동광 (1999) 「과학대중화의 새로운 시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편, 『진보의 패러독스』, 당대.
- 김두환 (2000)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협력적 계획모형의 적용: 합의회의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수 (2000) 「대안적 정책결정모델로서 합의회의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명식 (2000) 「미래세대와 환경윤리 1: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만 하는가」, 『철학연구』 49집, 철학연구회.
- 김환석 (1999) 「과학기술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편, 『진보의 패러독스』, 당대.
- 김환석 (2001) 「인간배아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국제적인 규제 동향」, 미출간 발표문.
- 박은정 (2000)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시민패널 (1999) 「시민패널 보고서」, (<http://www.unesco.or.kr/cc>)
- 심순영 (1999) 「시민패널이 본 합의회의」, (<http://www.unesco.or.kr/cc>)
- 울리히 벡 저, 홍성태 역 (1997)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이영희 (1997) 「유럽의 기술영향평가활동, 참여적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흐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이영희 (2000)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한울 아카데미.
-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 자크 엘루 저, 박광덕 역 (1996) 『기술의 역사』, 한울.
- 하버마스 저, 한상진, 박영도 역 (2000),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 한스 요나스 저, 이진우 역(1995)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윤리학』, 서광사.

- Barber, Ian, G. (1993) *Ethics in an Age of Technology*, Harper San Francisco.
- Barnes, Marian (1999) *Building a Deliberative Democracy: An Evaluation of Two Citizens's Jurie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Bebhabib, Seyla (1996)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Bebhbabib, Seyla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hman, James (1996)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Bohman, James (1998) "The Coming of Ag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no 4, 400-425.
- Cohen, Joshua (1996)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Bebhbabib, Seyla eds.,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onberg, Tarja (1995) "Do marginal voices shape technology?", Joss S. & Durant, J. eds.,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the role of consensus conference in Europe*, Science Museum, London.
- Dobson, Andrew (1996)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Lafferty William M., & Meadowcroft James 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Edward Elgar.
- Dryzek, John,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 Elster, Jon (1992) "The market and the forum: three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Elster Jon & Hylland Aanund(ed),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ster, Jon ed.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in, Robert E. (1996) "Enfranchising the Earth, and its Alternatives", *Political Studies* XLIV, 1996, 835-849.
- Hesse, David, J. (1997) *Science Stud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 Joss S. & Durant, J. (1995)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the role of consensus conference in Europe*, Science Museum.
- Habermas, Jurgen (1996) "Three Normative Model of Democracy", Bebhbabib, Seyla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uffe, Chantal (1999)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Social Research* vol 66. 745-758.
- Naess, Arne (1979) "Self-realization in Mixed Communities of Humans, Bears, Sheeps, and Wolves", *Inquiry* 22.
- O'Neill, John (1993) *Ecology, Policy and Politics*, Routledge.
- O'Neill, John (2001a) "Representing people, representing nature, representing the world", (unpublished paper).
- O'Neill, John (2001b) "The Rhetoric of deliberation: some problems in Kant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unpublished paper).
- Rawls, John (1973)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nn Ortwin & Webler Thomasr & Wiedemann Peter (1995) *Fairness and Competence in Citizen Particip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inger, Peter (1983)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Wynne, Brian (1992) "Misunderstood Misunderstanding: social identities and public uptake of scie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1: 281-304.
- Young, Isis, Maria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Behhabib, Seyla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oning, Consensus Conference, Deliberative Democracy

Kim, Myung-Sik

This article addresses the 2nd Korean consensus conference on cloning that was hel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 1999. Though previous perspectives recognized the conference as a new citizen's participatory institution, they do not consider that it contains the ideal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rticle notes that the citizens participated directly and handled the important social agenda through debate in the consensus conference. The consensus conference is another democratic form derived from preference aggregating democracy in the sense that it basically depends on public judgement of the citizens. This consensus conference has the historical meaning because it is in fact the first experi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1) We exam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onsensus conference. They are social constructionism of science, the tradition of societal debate, and deliberative democracy.

2) We explore what deliberative democracy is. It is different from aggregating preference democracy in the sense that it depends on public judgement rather than private preferences.

3) We investigate the features and mea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experiment on the conference. In the Consensus Conference it was observed that citizens changed their preferences and went forward to developing their view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t can be sai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However, it is simultaneously an opportunity to clarify some problems of deliberative democracy. First of all, it shows that there were hierarchies within the citizens' panel as well as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specialists' panels. Secondly, there are difficulties in expressing the value of life in argument or discourse. Also, we need the institutional efforts concerning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in the respect that cloning relates to them.